

해외 전문가 칼럼 | 2023년 12월

인도 원자력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

들어가며

인도 원자력 부문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 원자력 발전의 역사

인도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기술의 힘을 활용하고자 인도 원자력 에너지(Nuclear Energy) 미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40년대에 시작돼 1974년 첫 핵 실험을 단행했던 인도 원자력 프로그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인도는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으나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도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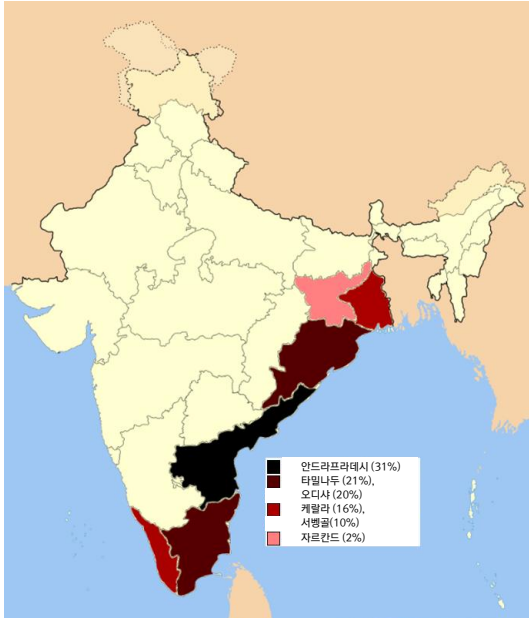
이후 인도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다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네트워크, 연구개발 시설, 핵연료 사이클 역량 등 포괄적인 원자력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인도의 원자력 에너지 계획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 활용과 토륨을 주요 핵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Satish Kumar

· 칸푸르 인도 공과대학교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박사 연구원

[그림 1] 인도 동부 연안의 주요 토륨 매장지



출처: Wikipedia

인도는 세계 최대 토륨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처럼 풍부한 토륨 매장량은 인도 원자력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됐다.

토륨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우라늄보다 방사능 누출이 적다는 점에서 핵연료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인도의 토륨 기반 핵연료 사이클을 위한 비전은 3단계 원자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다. 1단계는 주로 우라늄 기반의 가압중수로(PHWR)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고속증식로(FBR)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3단계와 4단계는 에너지 안보와 보다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첨단 토륨 원자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도는 원자력 안전, 폐기물 관리, 핵 비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 프로토콜에 투자하는 등 책임감 있는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인도는 원자력 발전량을 급격히 확대하는 등 기술 진보를 이뤘다. 인도는 현재 7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22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발전 용량은 약 6.7GW다. 원자로로는 PHWR, 경수로(LWR), 비등수형 원자로(BWR), FBR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카크라파르 원자력발전소(KAPS), 라자스탄 원자력발전소(RAPS) 등 원자력 프로젝트들이 신규 원자로 건설을 통해 확장되었다. 인도는 첨단 중수로(AHWR), 토륨 원자로 등 첨단 기술에 중점을 두고 향후 더 많은 원자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도, 다양한국가들과 원자력 협력협정체결

인도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민간 원자력 에너지 기술 협력 협정을 통해 국제 협력을 공고히 해왔다. 이 협정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인도는 2008년 미국과 이른바 ‘123 협정(123 Agreement)’으로 알려진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인도의 핵 고립을 종식하고 글로벌 원자력 기술 및 연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은 같은 해 9월 인도에 면제권을 허용함으로써, 인도는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이 아님에도 국제 원자력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도는 프랑스와 자이타푸르(Jaitapur)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 12월 인도와 각 1,650MW 용량의 3세대 EPR 원자로 2기 건설을 위한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인도가 NPT 비가입국인 까닭에 거래를 꺼리는 일본에서 압력용기 등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2] 자이타푸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현장



출처: Ecologise.in

그럼에도 양국의 협력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2021년 4월 프랑스 EDF는 자이타푸르에 3세대 EPR 원자로 6기(총 9.6GW)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2023년 7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회동을 갖고 이 발전소 프로젝트의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프랑스 기업들이 인도 원자력 에너지 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

인도 원자력 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의 전략 및 역할

인도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탄소 발자국 저감 의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인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렸다. 인도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용량 확대를 위해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 원자력 부문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은 외국 기업들에게 첨단 기술, 연구 개발 기회 등을 제공하여 매력적이다.

외국 기업들은 인도원자력공사(NPCIL) 등 인도 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합작사업을 통해 인도 원자력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인도의 복잡한 원자력 업계를 이해하고 진출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현지 지식, 규제 통찰력, 구축된 네트워크 등을 제공한다. 실제로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인도원자력공사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 원자력 분야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졌다.

또한 외국 기업들은 인도에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인도가 현대적인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역동적인 인도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원자력 발전소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도 실행 가능한 전략이다. 여기서 외국 기업들은 원자로 건설을 위한 핵심 부품, 장비, 원료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공급망으로의 통합은 꾸준한 참여와 수익을 보장한다.

인도의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된다. 여기에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장학금 제공, 첨단 원자로 설계 협력, 인도의 야심 찬 원자력 목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의 포지셔닝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경험이 있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프로젝트 시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들의 전문 기술은 프로젝트가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원자로 압력용기, 스팀 발전기, 제어 시스템, 계측 및 제어 시스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원자력 장비 및 부품 제조사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핵연료 생산 관련 기업들은 발전소 가동 중단을 방지하는데 핵심적인 농축 우라늄 등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인도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 기술 공급업체들은 첨단 원자로 설계, 안전 시스템, 계측 및 제어 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의 첨단 원자력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인도 손해배상책임법에 대한 주요 쟁점과 최근 논의

1962년 제정된 인도의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에는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책임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인도는 관련 국제 원자력 책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08년 미국에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CSC)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고, 그 결과 손해배상책임법인 원자력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법(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CLNDA)이 2010년 제정되었다. 이후 인도 정부는 2010년 10월 CSC에 서명하고 2016년 2월에 비준했다. 외무부는 CSC 비준이 인도의 원자력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CSC와 CLNDA 간의 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각 원전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을 150억 루피(약 2,400억원)로 설정한 책임 상한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 정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책임 부담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 정부는 최대 3억 달러의 특별 인출권을 제공한다. CLNDA의 재정적 영향이 명확해지면서, 인도는 신규 원자로에 대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CLNDA는 원자력 사고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했지만, 특히 재정 지원 및 책임 한도와 관련하여 그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규정된 책임 한도가 장기적인 비용과 손해를 감당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조항으로는 원전 사고에 대한 재정적 책임 분담을 정의하는 6조와 사업자(즉 NPCIL)만이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7조가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이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책임을 제한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불충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상 청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18조는 장기적인 피해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법이 원자력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와 일상적 위험 모두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표] CLNDA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사업자의 구상권(17조)	원자력 시설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원자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a)	서면 계약에 구상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 (b)	원자력 사고가 특히 또는 잠재적 결함이 있는 장비나 자재의 공급 또는 표준 이하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공급업체 또는 그 직원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 (c)	원자력 사고가 원자력 피해를 야기할 의도로 이루어진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결과인 경우
청구권의 소멸(18조)	원자력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다음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제3조 1항에 따라 통지된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 (a)	재산 피해의 경우 10년,
- (b)	인명 피해의 경우 20년
	다만, 해당 원자력 사고 이전에 도난, 분실, 폐기 또는 유기된 원자력 물질과 관련된 원자력 사고로 인해 원자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원자력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을 계산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도난, 분실, 폐기 또는 유기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외 공급업체를 위한 CLNDA 관련 권고사항

먼저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CLNDA의 조항, 특히 17조를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CLNDA의 요건에 부합하는 포괄적 책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은 잠재적인 원자력 피해 배상 청구를 보장해야 하며, 법에 부합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또 철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원자력 활동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공급업체의 원자력 활동이 국제 안전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한다. 공인된 표준을

준수하면 안전에 대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으며, CLNDA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책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규정 준수에 대한 지침과 위험 관리 전략 개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법률 전문가는 원자력 관련법의 해석을 돕고, 잠재적 책임에 대해 조언하며, 규정 준수를 위한 단계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원자력 활동, 안전 조치 및 규정 준수 노력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문서화는 안전 기준과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인도 법인과의 계약서 초안에는 CLNDA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특히 면책 조항, 책임 한도 및 기타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좋다.

원자력 활동을 감독하는 관련 정부 기관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규제 당국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법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강력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 당국과의 협력, 직원 교육, 원자력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끝으로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CLNDA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이슈나 우려되는 부분은 즉시 해결할 것을 권한다.

한국 원자력 산업을 위한 권고사항

급증하는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인도 원자력 산업을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의 핵심 축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우라늄 매장량이 제한적인 까닭에, 인도는 핵연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국제 협력에 참여해왔다.

2008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면제 승인을 계기로 인도는 외국과의 원자력 기술 교류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어 2011년 한국과 인도의 원자력 협정 체결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원자력 확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도 원자력 에너지 업계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권고에 앞서 인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는 다양한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야심 찬 원자력 발전 목표도 설정했다. 또 다양한 국가들과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기술 이전, 핵연료 공급, 전문기술 교환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협정들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도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권고

인도 원자력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려면 한국 원자력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특히 인도원자력공사 등 핵심 기업들과 연합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협력 사업은 지식 교환을 촉진시키고 현지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복잡한 인도의 원자력 산업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술 이전 및 협력은 한국 원자력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이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첨단 원자로 설계, 안전 시스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인도 기업들과 공동 연구 및 개발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APR1400 등 첨단 원자로 설계를 인도에 제공함으로써 인도 에너지 안보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인도 내에서의 평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인도 원자력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한국 원자로 기술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공급망 통합은 한국 원자력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전략 중 하나다. 한국 원자력 공급업체들은 원자로의

핵심 부품, 장비, 소재 등을 공급하면서 품질, 안전, 신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인도 원자력 공급망에 필수적인 기여자가 될 수 있다. 안전과 품질 확보는 한국 원자력 기업이 인도 원자력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인도 원자력에너지 규제위원회(AERB)의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사고나 규제 위반은 기업의 평판과 전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민감성과 현지 참여는 한국 원자력 기업이 인도 원자력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인도 문화, 사업 관행, 규제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도 고객과 이해 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현지 지역사회, 정부 기관,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 참여는 인도 원자력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규제 준수와 현지 적응력 역시 중요하다. 인도 원자력 규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실사 및 투명성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인도의 지리, 기후, 자원 가용성 등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현지 조건에 맞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및 사회적 책임도 성공의 필수 요소인데, 인도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수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원자력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투명성, 지역사회 우려 해소, 인도 원자력 발전의 혜택 강조 등이 중요하다.

▲인도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에 대한제언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핵심 지역에 지역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 지역에 물리적인 입지를 구축하면 기업들은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개선하고 인도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여 프로젝트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적 민감성 측면에서 기업들은 인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위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를 권장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직원들은 문화적 인식을 함양하여 사업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문화 교육은 현지 카운터파트와의 효과적인 소통 및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조화로운 근무 관계 및 전반적인 사업 효율을 촉진한다. 성공적인 시장 진출의 전제 조건은 사업 관행을 인도의 통념과 기대에 맞도록 적응시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인도 문화와 사업의 복잡성에 맞는 접근 방식을 통해 현지 사업 환경에 보다 순조롭게 녹아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와의 조율을 강화하고 인도의 독특한 사업 특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숙련 근로자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 기술 발전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지역 교육 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숙련 근로자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숙련 전문가 풀을 조성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은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인력을 육성하고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에 혜택을 주는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 현지 원자력 발전소 시장의 특성

인도 정부는 2032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을 9%로 높인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상당한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원자력 산업에서 인도 및 해외 기업들은 이러한 에너지 수요 증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지원 정책 및 협력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추진을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또한 인도의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원자력 사업의 안전 및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사를 확인하고 시장을 분석하여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쌓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론

인도는 에너지 수요 급증 및 배출 저감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미션을 추진 중이며, 원자력 발전 용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서 프랑스, 미국 등과의 원자력 협력협정과 같은 국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업계는 첨단 원자로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 원자력 산업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 지식 이전, 핵심 부품 공급, 안전 및 규제 준수, 문화적 민감성 인식 등이 필요하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해당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